과속 단속 카메라 조작 실수 356명 범칙금 면제 '횡재'

경찰이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단속에 적발된 356명의 운전자가 범칙금을 면제받는 '횡재'를 하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동구 산수터널 인근 제 2순환도로에서 과속 단속을 실시, 3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게 됐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사용한 이동식 카메라의 시각 설정이 실제 시각보다 50분 빨랐던 것. 지난달 29일이 휴일인 탓에 비전담 요원이 단속을 했는데, 단속 직전 카메라의 시각 설정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적발자들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광주 북부소방서의 민원 제기를 받고서야 잘못을 인지했다.

북부소방서는 소속 구급차가 지난달 29일 오전 8시54분 산수터널을 시속 110㎞로 달려 제한속도(시속 90㎞)를 넘겼다는 통지서를 받자, 구급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범칙금을 면제받으려고 차량 운행일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행시간이 오전 9시40분인 것을 확인, 경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동부경찰서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속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적발자들의 범칙금을 모두 면제해야 할 것 같다"면서 "경찰청의 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적발자들에게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적발자에 대해서는 환급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한최고속도보다 20km이하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 ▲20~40km는 6만원 ▲40km 이상은 9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교원 수급계획 재검토" 광주교대생 수업 거부

광주교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8일 오후 교내 다목적회관에서 가진 전체 학생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 참여인원 1천726명 가운데 1천468명(85.1%)의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결정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2007~202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업을 무기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내년 시범실시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참관기

배심원단 "평결은 무죄입니다"

검사·변호사 3시간 유·무죄 공방 스크린 동원해 배심원 설득 안간힘

판사는 물론 검사와 변호사, 방청객들은 배심원들의 입에 눈과 귀를 모았다.

"물증은 부족하나, 관행상 유죄로 본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 무죄 아니냐"는 항변이 4시간여 법정 공방의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8일 오후 5시 광주지법 5층 소회의실.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 모의재판에 참석한 9명의 배심원이 건설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구청장의 유·무죄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은 만장일치 무죄. "돈을 피고에게 건넸다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배심원들은 "물적 증거가 없어 결정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강신중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 도출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면서도 "증언도 하나의 증거인데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재판 대상은 가공의 인물인 강병길(59)씨가 광주시 봉천구청장 재직 시절인 2004년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부하인 도시국장을 통해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뇌물 수수한 사건이었다.

검사와 변호사들은 이날 법관보다 배심원단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 근거는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 ▲법정에서 제시된 물증 뿐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수차례 상대방의 신문에 '이의제기'하며 3시간이나 끌었다.

양측은 사건 개요도와 증거 설명도 등을 법정에 마련된 스크린 화면에 비추며 설명을 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가 주최한 이날 모의재판에는 3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배심원단 선서 광주지방법원에서 8일 열린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배심원으로는 일반시민 9명이 참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3륜 외에 배심원단을 재판에 도입하는 제도.

살인·강도치사·뇌물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피고인이 원할 경우 5~9명의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한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 시범실시한 뒤 2012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된다. 시범 기간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적' 의견에 그치게 된다. 검사와 변호사의 감정에 호소하는 화술(話術)에 배심원의 평결이 좌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얼빠진' 진도경찰

시민 신고로 잡은 절도 용의자 감시소홀 도주…나흘 만에 검거

시민의 신고로 붙잡힌 절도 용의자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경찰서에서 달아났다가 나흘 만인 8일 검거됐다.

진도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소방파출소 앞길에서 지난 4일 진도경찰서에서 도주했던 절도 용의자 김모(40·광주시 남구 양림동)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진도군 S전자대리점에 들렀다가 '컴퓨터 절도 용의자'와 인상이 비슷한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지난 12일 충남 서천군 S전자대리점에서 노트북 1대(100만원)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혀 내부 통신망에 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조사대기 중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간 뒤 창문을 빠져나갔다. 화장실 밖에는 경찰관 1명이 지키고 있었고, 창문은 화장실 뒷벽 130㎝ 높이, 가로 80㎝×세로 60㎝ 크기로 방범망은 없었다.

경찰은 김씨가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K렌터카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 3일 동안 타고다니다 반납했다는 정보를 입수, 전화추적을 통해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도주기간 동안 김씨가 또 다른 범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나원참 〈6971〉 김종두

검찰 '어린이 구하려 음주운전' 관용

쌍나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43%(면허취소) 상태로 차를 운전한 김모(39·여수시 봉강동)씨를 기소유예하고, 운전면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조치.

○…김씨는 지난 8월30일 밤 9시40분께 여수시 여서동 한재 터널 부근 도로에서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업은 박모(여·32)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도 잊은 채 박씨의 승용차를 대신 몰고 병원에 급히 데리고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됐던 것.

○…박씨는 26개월 된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치자 병원으로 가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검찰에 당시의 절박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김씨를 구명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사건을 맡은 김창수 검사는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까지 단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설명.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